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난항을 겪어 왔던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2차 조정 끝에 잠정 합의됐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회사측 대표와 광주시내버스 노조 대표들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금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임금협의안은 ▲통상임금 3.8% 인상 등 5개 항 합의 2차 조정 4개월 마라톤 협상 마무리

통상임금 3.8% 인상 등 5개 항 합의

2차 조정 4개월 마라톤 협상 마무리

▲무사고수당 5000원 인상 등이 주요 골자다.

노조측이 요구해 왔던 중형버스 근로자 계약 기간 1년 주기에서 66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10% 인상안에 서 한 발 물러서 3.8% 인상안을 수용하는 대신, 10호봉 신설이나 정년 연장 등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4개월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진통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노시간 입장차로 임

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1차 조정은 무산됐다.

이번 2차 조정 끝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 당초 우려됐던 시내버스 파업사태는 피하게 됐다.

광주지내버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8일께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10개 회사 99대가 운행중이다.

서은홍 기자

전국 사찰 최근 5년간

262건 화재 발생 ‘주의’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쭈불 등 화기 취급이 늘면서 국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2건이었다. 사망 1명, 부상 12명 등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불씨·불꽃 방지 등 부주의가 94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접촉 불량이나 열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71건(27%)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63건(24%)이나 됐다.

전국의 2만700여 불교 사찰 가운데 96개소가 민족문화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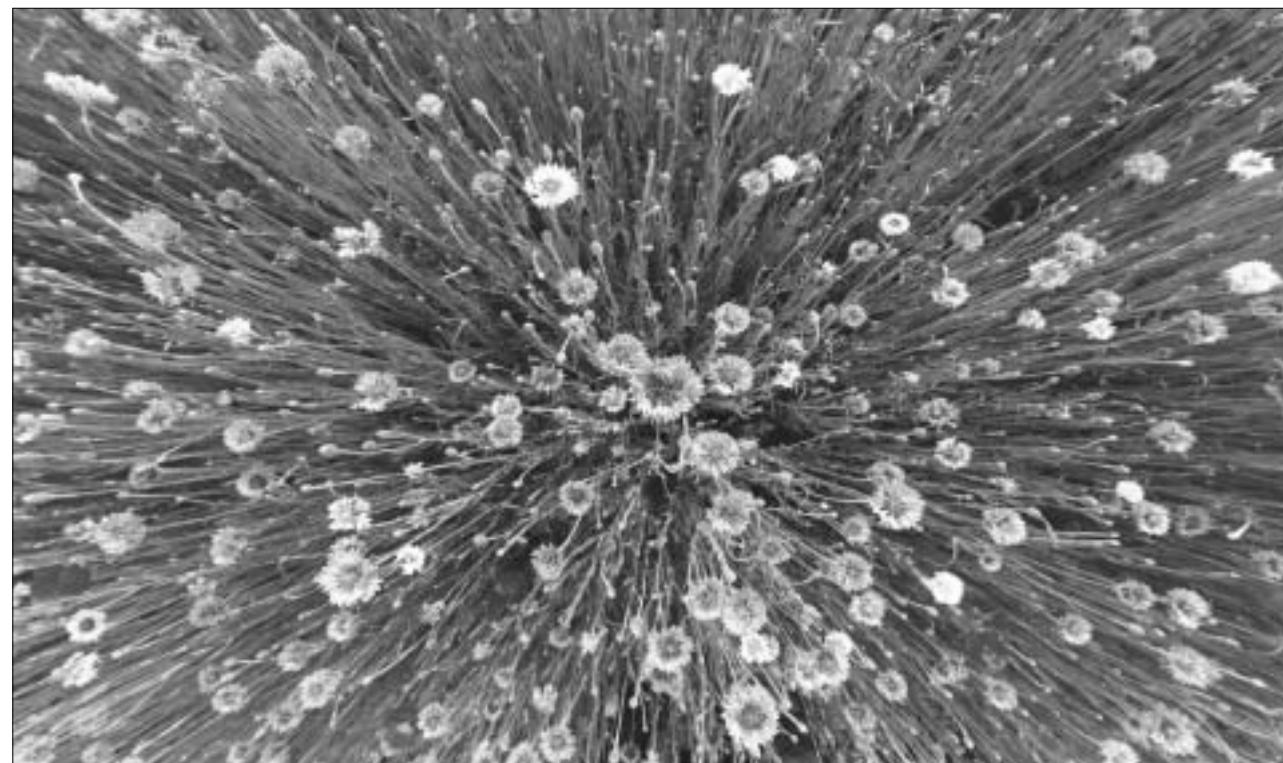
또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목조와 종이 등 불이 옮겨 불기 쉽고 타기 쉬운 문화재 비율은 전체(4525건)의 31%(1413건)로 높은 편이다. 종교별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불교가 가장 많아 사찰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는 각종 불교 행사로 화기 취급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많은 전기와 가스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연등을 달 때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돼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촛불이나 향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불이 옮겨 불기 쉬운 기성성 물질은 멀리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뉴시스



공작새처럼 화려한 수레국화와 개양귀비꽃 17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경관단지에서 활짝 핀 수레국화와 개양귀비꽃이 마치 공작새처럼 화려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노동계, “정부가 탄력근로제 조장 경악” 일제히 비판

노동계가 정부의 5·17 노동시간 단축 협정안과 대책에 대해 부실 대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은 제도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제도를 죽歼거하면서 그 앞에다가 ‘실노동시간’이란 수식어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또 인건비 지원액과 임금보전 기간 3년 확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는 경우와 500인 이상 제조업과 특례제외 업종에 국한된다는 까다

로운 조건이 붙어 활용도는 크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자집, 버스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 활용인데 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기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힘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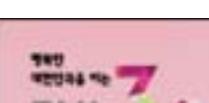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협정안과 지원 대책”은 협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온갖 폼수와 불법, 편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 행정권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제외 업종대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

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 “기존 제도에 생색내기 지원을 조급 더 한다고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신청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례제외 업종 특화 지원·관리 대책방안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강조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는 점”이라며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켰더니 탄력근로 유연근로의 전국 업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출처: 정부 3.0, 보건복지부, 2015. 1월 발표

▲연령대는 10~69세입니다.

▲연령대는